

■ 금융경색과 사료산업

새만금의 식량자원개발화 시급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 비상구가 보인다

- 농식품부가 발표한 2007년 농림업 생산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35조 8천 72억원이며, 농업 생산액은 34조 6천 8백 50억원이었다. 이 중 축산부분 생산액은 11조 2천 7백 73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32.5%였다. 2006년의 11조 6천 7백 63억원에 비교하여 3천 9백 90억원이 감소(3.4%)하였다. 이것은 돼지, 닭, 오리 등의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품목별 생산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곡, 2위가 돼지, 3위가 한우, 4위 우유, 5위 닭, 계란이 7위로서 10대 품목에 5대 축종이 다 들어갔고 오리가 15위, 육우가 25위로 발표되었다. 즉 축산부문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의 32.5%, 10대 품목에 5대 축종이 다 들어 갔다는 것은 농업 중에 축산업의 위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농업은 축산을 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 농업이 존재해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고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축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료산업 없는 축산

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료산업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질 수 없는 산업이다. 그렇다고 위기에 가만히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자구책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료산업이 한국 축산업을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이오 에탄올 수요 증대와 운송비 증가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사료회사와 양축가의 고통이 개방 확대보다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전 세계적 추세이다. 사료시장과 축산물 시장이 이미 국제 시장화한 입장에서 보면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죽을 지경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 다만 사료 원료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사료값이 오르더라도 축산물 값이 이에 상승하게 인상된다면 양축가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소비를 다소 줄일 것이고 이에 따라 양축가는 생산을 줄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축산물 가격은 생산비와 관계없이 오직 수요공급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오르더라도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다. 전 농산물이 다 그렇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정부가 가격 안정 정책을 쓰던가 소득 안정 정책을 쓰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다. 아무튼 사료원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축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축가 만이 아니라 사료업계와 정부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발표하였다. 그 정책이 실현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비상구가 어디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상구를 향해 온 힘을 다하면 탈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사료업계는 비상구를 향해 진력해야

-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즉, 사료협회와 농협이 사료원료를 공동 구매하도록 사료원료 구매자료 지원을 우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사료협회가 현재 구매 방식을 단일 구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 다음으로 농협 사료와 공동구매를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은 상호협의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매 방식만 바꾸어도 상당한 교섭력이 향상되어 현재보다 유리하게 원료 곡을 수입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4개월 소요물량 · 구매방식을 6개월 이상 장기 구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사

정과 저장창고 문제만 해결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료 업계가 움직이고 있는지 외부에는 그런 노력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국제곡물 메이저들의 관행적 거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식품부는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옥수수, 대두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입 대체원료와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나 사료업계는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원료곡 가격이 오르면 양축가에게 전가하면 문제가 없는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흡수해야 하는데 상기 농식품부가 제의한 그런 정책을 얼마나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홍보가 덜 되었다면 사료업계는 보다 적극적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사료업계는 지금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사료업계는 한때 이익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정부의 추가 대책

-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정부는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요청하고 있는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현행 2/102를 5/105로 상향 조정해 주고, 사료 관련 모든 관세를 무세로 전

- 환하여 개방화에 따른 차별화를 제거해 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사료 원료곡 수입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 시될 것이다. 즉 수출국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 에너지의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하고 석유 에너지와 함께 식량에너지도 동시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는 석유에너지와 식량에너지를 뮤어서 해결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에너지총리, 에너지대사 임명 등 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두고 상기와 같은 개념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해외 식량 기자화 사업은 국내 간척지를 활용할 식량 자원 개발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외교 및 기술적인 지원, 정보 제공, 유통분야의 융자금 지원 등 간접적 지원인데 이것은 석유 자원 개발과 같은 차원의 에너지 개발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석유 자원 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식량자원개발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먼저 상대국과 투자 보장 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민간 부분의 노력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 인프라 투자의 경우도 민간에게만 맡기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인프라 투자는 양국이 정부간의 공동투자가 이루어져야 민간분야가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차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상환문제를 우리 제품 판매와 연계하거나 농산물과 언계하거나 상호협력 가능한 협정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KOIKA 사업과 반드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섭 중에 있는 나라가 동남아시아, 러시아 등의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 곡물 메이저가 이들 국가에 개입을 망설여 왔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실패한다. 반드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경제협력 이외에 문화적 교류가 함께 가야 성공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석유공사와 같은 역할을 농촌공사가 하도록 제도적 · 예산적 지원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보통 하는 정책적 수준에서 추진하면 실패가 눈앞에 보인다. 특단의 각오로 시작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해외 식량자원개발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 새만금의 식량자원개발이다. 현재 정부가 새만금의 토지이용을 농업, 비농업의 비중을 7:3에서 농업, 비농업 3:7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농업의 토지 이용 수요를 100% 수용하더라도 30% 이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이다. 해외자원 개발의 수많은 Risk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비농업의 토지 수요를 충족시켜 가면서 식량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만금의 식량자원개발인데 이것에 적극 투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발표했다손 치더라도 해외

식량기지 사업의 효과적 추진, 에너지 확보, 국내 조사료 자급화, 지구 온난화 방지 등의 주요 정책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만금 간척지의 식량에너지 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8월 4일자로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제2의 녹색혁명」의 핵심과제가 바로 새만금의 농지이용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보완은 신임 장관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 양축가들의 노력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AI 발생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시련을 양축가들이 겪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사료값 인상이다. 최근 원유가격 하락과 국제 곡물 가격 하락이 향후 사료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사료 가격 인상폭의 문제이지 하락할 전망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서 국제 시장에서 우리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축산업을 유지 할 것인가, IBP, 엑셀, 몽포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 시장을 파고드는데 대응 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전환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자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 즉 한우는 꼭 높은 가격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지, 개별 농가 단위로 다국적 기업에 대응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가면

우리 축산은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기호식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경종농업은 유기질 비료 공급원을 상실하게 되어 과다한 농약사용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농축산업 전체는 뿌리 채 흔들리고 전체 경제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농축산업이 선진화 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 양축가들은 우리 자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우선 사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지금 급여하고 있는 사료 배합비가 적정한지 알아봐야 한다. 사료 회사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주면 되느냐, 잘 모르니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만 생각 할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배합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축산 할 자격이 없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면 아직은 우리 축산이 사료값 때문에 죽겠다고 할 정도의 어려운 사정이 아닐 것이다.
- 양돈농가 중에 외상 사료값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분도 계신다고 한다. 최근 수많은 양돈농가가 폐업했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MSY 20두 이상, 출하 전 절식, 자기 나름대로의 사료 급여를 하고 있는 양돈 농가는 지금도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한다. 지난 번 국회 모 의원 주관으로 사료 가격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어느 토론자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에 나오는 유통기간 경과한 여러 가지 식품을 돼지 사료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 주변에 사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야 하고 유실되는 사료는 한 톨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지, 사료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육 방법은 없는지 찾아 봐야 한다. 일본의 「에코피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체 사료를 찾고 사료 효율을 올리면서도 품질을 향상시키고 수입 축산물에 대응 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와 같은 사례를 찾아 양축가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사료협회가 한다면 사료협회는 양축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국내에 이와 같은 사례는 있다고 본다.

■ 맺는 말

- 사료 원료곡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환율을 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이자율을

정부나 한국은행이 시장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정해서도 안되며 농가부채가 단기간 내에 해소 될 수도 없다. 정부가 사료업계나 양축가가 원하는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농가 단위 소득직불제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농가소득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사료가격 문제는 세계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전 세계는 자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축산의 핵심은 사료문제이며 축산은 농업의 중심축이 되어 있다. 농축산업은 국가 경제의 필수 산업이고 축산의 선진화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료문제는 국가, 사료업계, 양축가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온 힘을 다 할 때 하늘은 우리를 도와 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암흑의 터널을 지나 햇볕이 빛나는 신천지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